

희비 엇갈리는 광주·전남 고용지표

지난달 취업자 전년 대비 4000명 늘고 1만 3000명 줄어
광주, 일자리 질도 개선·전남, 실업률 2개월 연속 하락

광주와 전남지역 고용지표가 5개월 연속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비 증진 등 전반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취업자 수와 고용률도 꾸준히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에도 호재가 잇따랐지만, 전남은 새해 들어서도 고용지표가 지속 하락하는 등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11일 국가데이터저치 호남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2026년 1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광주시 취업자 수는 76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9%로 전년보다 1.3%포인트(p) 올랐다.

광주 취업자 수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년 동월 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월에는 1년 전보다 취업자 수가 1만 7000명 감소하는 등 청년·노년 대부분 연령층에서 고용이 줄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새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진흥을 위한 정책 등의 영향으로 9월(1만 9000명), 10월(2만 6000명), 11월(1만 9000명), 12월(1만 1000명) 등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농림어업(-1000명)과 제조업(-5000명)은 여전히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3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8000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00명) 등은 늘었다. 특히 지난 2023~2025 상반기까지 광주 '부동산 한파'로 장기간 가라앉았던 건설업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골고루 수주가 늘면서 서서히 관련 기업들의 채용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는 일자리 질도 개선됐다. 임금근로자 중 정규직 등 상용근로자는 전년에 비해 1만 5000명 늘었고, 임시근로자는 8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고용지표는 하락을 거듭했다.

지난달 전남 취업자 수는 95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3000명 감소했고, 고용률도 1.1%p 내린 62.3%를 기록했다.

전남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떨어지는 추세인 반면, 실업률은 2025년 12월(0.6%p), 2026년 1월(1.2%p) 등 2개월 연속 오르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이다.

전남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지역 주요 산업인 농림어업(-1만 2000명) 취업자 감소폭이 컸고, 어느정도 지역 내수가 살아난 광주와 다르게 소비 심리가 여전히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도소매·숙박·음식점업(-1만 8000명), 건설업(-5000명) 등에서도 취업자가 줄줄이 줄었다.

전남은 일자리 질 악화도 지속됐다. 전체 임금근로자가 58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3000명 줄어든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1만 7000명 늘었지만, 임시근로자(-1만 6000명)와 일용근로자(-5000명)는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상의 “정부, 광주·전남 행정통합 책임 있는 결단 필요”

“중앙부처 특례 불수용에 우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는 11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를 위해 정부의 과감하고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앙부처가 대규모 특례 불수용 방침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앙부처는 현재 논의 중인 특별법안 386

개 조문 중 119개의 특례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광주상의는 “에너지 신산업, 인공지능·반도체, 항만·물류, 국가산업단지 육성 등은 지역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분야”라며 “형평성과 전국 확산을 이유로 관련 특례를 배제한 것은 지역 현실과 국가 전략적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별법에서 핵심 특례가 제외되면 행정통합은 실질적 권한과 추진 동력이 없는 허울뿐인

통합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지역의 기대와 염원을 외면하는 것이며 현 정부가 강조해 온 5급 3특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개별 중앙부처의 판단을 넘어 범정부적 조정과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행정통합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하고 분명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은 설 자금 방출 설을 앞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직원들이 시중은행으로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력 단절 끝...광주새일센터, 상담·AI 교육 등 취업 지원

다음달부터 여성 취업 프로그램

광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광주새일센터)는 “올해 ‘여성 고용유지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경력 단절 예방지원사업’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구직·재직 여성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 상담,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재직자 마케팅 실무교육, 정리수납을 통한 일·생활 균형 회복 프로그램, 취업 초기 적응을 돕는 ‘새 내기를 부탁해’, 19~39세 청년 구직 여성을 위한 청년 여성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이다. 과정은 다

음달부터 11월까지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새일센터는 청년 여성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기이해 진단, 입사 지원 서류 컨설팅, 면접 전략, 재무·할링 특강 등 단계별로 구성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업 대상 지원도 강화된다. 기업 간담회와 네트워킹 포럼, 직장 문화 개선 교육·워크숍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과 경력 단절 예방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

광주새일센터는 지난해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통해 총 138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여성

참여자 3194명, 기업 42개소가 함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미희 광주새일센터장은 “지난해 실적은 여성과 기업이 함께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올해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이 참여해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은 광주지역 구직·재직 여성과 기업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새일센터 또는 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지방 중소기업 가장 큰 애로는 인력확보”

중기중앙회, 772곳 조사

지방 중소기업 5곳 중 3곳이 수도권 중소기업과 경영 환경에 격차를 크게 느끼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772곳을 대상으로 한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의견조사’ 결과를 11일 이같이 발표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63.4%는 수도권 기업의 경영 환경과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반면 수도권 중소기업의 경우 48.3%가 비수도권 기업과 경영 환경 격차에 대해 ‘보통’이라고 답해, 인식차가 확인됐다.

권역별로 보면 강원(79.6%)과 대경권(70.7%)이 격차를 크게 느낀다는 답변 비중이 높았다. 분야별로는 비수도권 기업의 66.2%가 ‘인

력 확보’에서 경영 환경 격차를 체감한다고 답했고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가 51.2%로 그 뒤를 이었다. 수도권 기업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기업과 인력 확보에서 격차를 느낀다는 응답이 69.7%로 가장 많았고, 인프라가 67.4%였다.

수도권 기업 203곳 중 99.5%는 ‘지방 이전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지방 이전을 계획하지 않은 이유로 ‘기존직원 지방 이전 기피’(47.0%), ‘기존 거래처와의 거리 증가’(44.6%), ‘물류·교통·입지 조건 악화’(32.7%), ‘인력 확보의 어려움’(28.7%) 등이 꼽혔다. /김해나 기자 khn@



해양에너지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터미널·전통시장 등 43곳 완료

해양에너지는 “지역민 안전을 위해 인구 유동량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동절기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점검은 지난 1월 26일부터 이번달 10일까지 2주 동안 광주·전남 소재 터미널, 공항, 지하상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

설 4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광호 해양에너지 안전관리본부장은 “겨울철은 가스 사용량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철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광주시 및 지자체와 함께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은 “행정통합, 거점도시 위상 강화 방향 추진”

“2~6개 지역 집중 개발해야”

한국은행이 11일 행정구역 통합을 거점도시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경남 등의 행정통합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한은이 기존 구조개혁 방안의 연장선에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한은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 성장은 비수도권에서 지역 간 이동성 강화와 세대 간 대물림 완화의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거점도시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기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2~6개 지역을 집중 개발해야 한다는 한은이 제시한 개념이다.

한은은 우선 이번 보고서를 통해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쟁력 대물림 관계를 규명하는 데 집중했다.

연구 결과,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할 경우 경제력 개선 폭이 확대됐지만, 광역권역 안에 머무는 경우 그 효과가 과거보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광역권역 내 이주의 경제력 개선 효과가 줄어든 것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 자녀들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수도권보다 인근 거점도시 등 권역 내 이동을 더 많이 선택하기 때문이다.

결국 비수도권 출생으로 고향에 남은 자녀들에게서 ‘가난의 대물림’이 심화했다는 게 한은 진단이다.

한은은 비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으로의 이주 유인이, 수도권 출생 자녀는 수도권 내 전류 유인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청년층의 일방적인 수도권 집중이 국가 전체적으로 지역 간 양극화, 사회 통합 저해, 초저출산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결론적으로 “비수도권의 산업기반과 일자리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은 거점도시 집중 투자가 긴요하다”며 “행정구역 통합 등도 거점도시 위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비례선발제’도 다시 언급했다.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신입생을 지역 비례로 선발하자며 한은이 앞서 제안한 방안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설 배송 왔어요” 문자, 클릭하면 위험

명절 앞두고 스미싱 주의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 명절을 악용한 미끼(스미싱) 문자 주의보를 발령했다.

11일 방미통위에 따르면 최근 ‘설날 대비 200만원 받으세요’, ‘설날행사 1+2=3통 행사’ 등의 미끼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

미끼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탈취를 위한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돼 무단 송금 및 휴대전화 원격 제어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방미통위는 미끼 문자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순차적으로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의심되는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고 전화도 받지 않아야 하며 불법 스캠 간편 신고 앱과 휴대전화 간편 신고, 불법스캠대응센터로 신고해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전남농관원 설 명절 원산지 단속 40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전남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결과 40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명절 기간 농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쌀·육류·과일·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성수품을 집중 점검했다.

단속 결과 외국인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경우가 32건, 원산지 미표시 8건 등 총 40건이 적발됐다.

농관원 전남지원은 거짓표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남윤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설 명절 기간 소

비가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유통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5354.49 (+52.80)
▼ 코스닥	1114.87 (-0.33)
▼ 금리 (국고채 3년)	3.200 (-0.024)
▼ 환율 (USD) 〈오후 6시 06분 기준〉	1449.25 (-9.85)